

일본인의 ‘전후’와 재일조선인관

— 미군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에 나타난 일본 사회의 여론

정용욱

* **지은이** |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6·25전쟁기 심리전과 냉전문화, 일기, 편지에 나타난 민중의 해방과 전쟁 경험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한정책』, 『강압의 과학 -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심리전, 1945~1960』 등의 저·역서가 있다.

1. 머리말

미국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 II at College Park, Maryland)과 맥아더 기념관(MacArthur Memorial Library & Archives at Norfolk, Virginia)에는 미군 점령기에 일본인들이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편지들은 일본인들이 패전 후 미군의 점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았는지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낸다. 소데이 린지로(袖井林二郎)와 가와시마 다카네(川島高峰)는 이 편지를 이용하여 미군 점령기 역사를 아래로부터 재구성한 뛰어난 연구를 발표했다.¹⁾ 소데이의 저서는 일본인 편지의 주요 내용을 범주별로 소개했고, 가와시마의 연구는 편지에 나타난 민심의 동향이 천황제 폐지, 전후개혁, 전범재판과 같은 당시의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의제와 어떻게 상호 연동했는가를 분석했다.

소데이와 가와시마의 연구는 편지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거나 그 내용의 역사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지만 편지에 담긴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은 더 많은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할 일본인들의 편지에 나타난 전후개혁, 전쟁책임 문제는 두 사람의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관점의 다양성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음미할 여지가 있고, 전후 일본 사회의 재일조선인관은 두 사람의 연구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으로서 또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령’과 ‘전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인들이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은 점령당국이나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기획한 여론조사보다 그 내용을 계측·계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발신자들의 생생한 생각을 여과 없이 보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점령군은 단순히 편지를 수집, 정리만 했던 것은 아니고 편지의 이러한

1) 袖井林二郎, 『拜啓マッカーサー元帥様 — 占領下の日本人の手紙』, 岩波書店, 2002. 영역본은 Sodei Rinjiro, *Dear General MacArthur: Letters from the Japanese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1; 川島高峰, 『敗戦: 占領軍への50万通の手紙』, 読売新聞社, 1998.

성격을 점령통치에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편지에 나타난 여론을 분석한 보고서들을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인들의 편지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그 보고서를 분석하여 자료의 성격, 편지에 나타난 여론의 전체상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 글에서 활용한 자료는 미 국립문서관 'RG 331, 연합군최고사령부 문서군'에 몇 개의 문서철로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²⁾

2. 점령당국이 조사한 편지의 추이

가와시마는 미군 점령기 일본인이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를 약 54만 통으로 추산했다.³⁾ 정확한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으므로 추산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자료 발굴 상황에서는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 소테이와 가와시마의 연구는 편지 분석의 일차적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 편지들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연합군최고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CI&E)이 여론 수집과 분석 차원에서 편지들을 검토한 뒤 작성한 "Survey of Opinions Expressed in Letters by Japanese to Occupation Authorities"(이하「편지 여론」으로 약칭)가 보다 유용하다.⁴⁾

2) 이 글에서 활용한 문서철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Public Opinion and Sociological Research Division, General Subject File, compiled 1946~1951, Entry 1700, Boxes 5875~5878, ② Assistant Chief of Staff, G-2, Intelligence Division, Miscellaneous File, 1945~51, Miscellaneous Letters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Entry 1129, Boxes 231~236, ③ Legal Section, Administrative Division, Japanese Background and Reference Files, compiled 1945~1948, Entry 1190, Boxes 992~1000, ④ Assistant Chief of Staff, G-2, Public Safety Division, Police Branch, Subject File 1945~1952, Entry 1140, Boxes 328~338, ⑤ Assistant Chief of Staff, G-2, Public Safety Division, Decimal File 1945~1952, Entry 1142, Boxes 353~358; ⑥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Public Information Section, Subject File, compiled 1946~1950, Entry 1102, Boxes 22~28. 이 문서철들은 모두 Record Group 331, Records of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Headquarters, World War II, 1907~1966,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의 일부이다. 특히 일본인, 재일조선인의 편지가 다량 포함된 문서철은 ②, ③이다. 이하 이 문서철들에 소장된 문서의 인용은 모두 '상자번호, 작성자, 작성 연월일'로 표기할 것이다.

3) 川島高峰, 「マッカーサーへの投書に見る敗戦直後の民衆意識」, 『明治大学社会科学研究所紀要』31卷 2号, 1993. 31쪽.

4) CI&E, "Survey of Opinions Expressed in Letters by Japanese to Occupation Authorities", No. 1~17(1946. 1. 2~1948. 2. 5.), Boxes 5875, 5878.

1) 민간정보교육국이 작성한 「편지 여론」

「편지 여론」 1호는 1946년 1월 2일 처음 작성되었고, 마지막 보고서인 17호는 1948년 2월 5일 작성되었다. 「편지 여론」은 1945년 11월 중순부터 1947년 10월 중순까지 약 23개월 분의 편지를 분석했다. 점령기 전 시기를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47년 10월 중순 이후 편지 내용은 미국 국립문서관과 맥아더 기념관에 있는 편지 원본들을 직접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편지 여론」이 작성된 1945년 하반기부터 1947년 하반기까지 약 2년 간의 시기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할 것이다.

1947년 10월 중순 이후에도 점령당국이 받은 일본인의 편지가 적지 않았으나 분석 주체인 민간정보교육국 여론·사회조사부(POSR)가 그 시점에서 「편지 여론」 작성을 마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무렵부터 해외의 일본인, 특히 소련군 점령지역의 일본인 귀환 문제가 편지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편지에 담긴 내용도 그 이전 시기만큼 다양하지 않았으며, 점령당국의 분석대로라면 대부분의 편지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청원’과 비슷한 성격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점령당국으로 하여금 편지를 통한 여론 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했을 수 있다. 또 점령당국이 일본정부의 여론조사 기구와 신문 등 민간의 각종 여론조사 기구를 장악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일본 사회의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지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 있다.

「편지 여론」은 편지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이 스스로 제출한 편지들이고, 발신자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본인 여론을 적절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관은 이 편지들이 오히려 미국 신문·잡지의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한’의 성격을 띠다고 보았다. 하지만 민간정보교육국은 「편지 여론」 1호에서 ‘이 편지들이 현재의 대중적 사고경향에 대한 훌륭한 지침이고, 미래에 조사해야 할 여론 분야를 가리키므로’, ‘편지들에 나타난 의견의 변화나 보충할 부분을 조사할 목적으로 2주일마다 유사한 조사를 벌이고, 이 조사를 서신 검열에서 나타난 여론 요약, 신문 보도 내용 분석, 점령당국이나 일본의 다른 여

〈표 1〉 「편지 여론」의 편지 분석 내용

호수	해당기간	편지 수	누적치	주당 평균 통수	주요 주제
1	1945. 11. 15~1946. 1. 1	282	282	47	1)점령군 2)교육 3)일본정부 4)천황제
2	1946. 1. 1~1. 15	118	400	59	1)교육 2)점령군 3)일본정부 4)천황제
3	1946. 1. 15~2. 15	287	687	72	1)천황제 2)점령군 3)교육 4)일본정부
4	1946. 2. 15~3. 15	801	1488	200	1)귀환 2)경제 3)전범 4)일본정부
5	1946. 3. 15~4. 15	1,425	2,913	356	1)경제 2)일본정부 3)귀환 4)전범
6	1946. 4. 15~6. 1	1,684	4,597	281	1)경제 2)일본정부 3)점령군 4)귀환
7	1946. 6. 1~7. 15	1,761	6,358	294	1)교육 2)식량 3)점령군 4)귀환
8	1946. 7. 15~8. 31	4,075	10,433	679	1)귀환 2)식량 3)일본정부 4)노동관계
9	1946. 9. 1~10. 15	6,339	16,772	1,057	1)귀환 2)노동, 공업 3)일본정부 4)식량
10	1946. 10. 15~11. 30	14,191	30,963	2,365	1)귀환 2)일본정부 3)조선인과 조선 4)식량
11	1946. 12. 1~1947. 1. 15	12,217	43,180	2,036	1)귀환 2)일본정부 3)노동관계 4)조선과 조선인
12	1947. 1. 15~2. 28	10,251	53,431	1,709	1)귀환 2)농업 3)점령군 4)사회문제(조선인)
13	1947. 3. 1~4. 15	41,820	95,251	6,970	1)귀환 2)농업 3)노동 4)식량
14	1947. 4. 15~5. 31	49,958	145,209	8,326	1)귀환 2)사회문제(조선인) 3)노동 4)농업
15	1947. 6. 1~7. 15	34,939	180,148	5,823	1)귀환 2)식량 3)개인 요청 4)일본정부
16	1947. 7. 16~8. 31	18,035	198,183	3,006	1)귀환 2)농업 3)식량 4)개인 요청
17	1947. 9. 1~10. 15	17,083	215,266	2,847	1)귀환 2)식량 3)개인 요청 4)일본정부

〈출전〉 “Survey of Opinions Expressed in Letters by Japanese to Occupation Authorities”, No. 1~17(1946. 1. 2~1948. 2. 5).

론조사 기관들이 수집한 여론조사와 연결해서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민간정보교육국이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배달된 편지 전량을 분석하기 시작한 1946년 2월 중순의 주당 편지 통수는 약 200통이었으나 그 숫자는 그 후 계속 증가했고, 조사 기간 중 주당 평균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8,300여 통이 배달된 1947년 4월 15일에서 5월 31일 사이다. 그때까지 편지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그 후 다시 감소하여 조사가 마무리된 1947년 10월에는 주당 2,800여 통에 달했다. 대체로 1946년 8월경까지는 주당 1,000통이 안 되었으나, 1946년 9월부터 1,000통을 넘어섰고, 그 무렵부터 편지 수가 급증한 것은 해외 일본인 귀환과 관련한 편지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표2〉 「편지 여론」 주제 구분의 변화 추이(괄호 안에 해당 주제가 등장한 호수)

- 1) 점령군과 그 정책
- 2) 천황제
- 3) 일본정부 → 일본정부와 정책(7) → 일본정부와 정치(9, 천황제, 공산주의 등 포함)
- 4) 전쟁과 군국주의 → 전쟁, 군국주의, 그리고 세계평화(5) → 전쟁, 군국주의, 평화(6) → 평화와 군국주의(7)
- 5) 전범 → 전범과 군국주의(8)
- 6) 경제 → 식량과 생활조건/금융/농업/공업과 상업/교통과 통신(7) → 식량과 생활조건/노동관계/금융과 산업/농업(8) → 식량과 생활조건/노동, 산업/금융/농업/교통과 통신(9) → 식량과 생활조건/노동/금융/농업/상업, 공업, 통신(10) → 식량과 생활조건/노동관계/상업, 공업, 금융/농업(11) → 식량과 생활조건/농업/노동과 공업/교통(12) → 식량과 생활조건/농업/노동과 공업(14) → 식량과 생활조건(15) → 식량과 생활조건/농업(16) → 식량과 생활조건(17)
- 7) 교육
- 8) 종교
- 9) 개인적 요청
- 10) 기타
- 11) 귀환(4)
- 12) 사회문제(4) → 노동관계(8)
- 13) 언론(5) → 라디오, 신문, 출판(7) → 홍보매체(11)
- 14) 조선(6) → 사회문제(8) → 조선인과 조선(10) → 조선과 조선인(11) → 사회문제(조선인)(12~14)
- 15) 공산주의(7)

〈표1〉은 「편지 여론」을 토대로 작성했고, 편지들이 다른 주제와 내용의 전반적 동향, 시기별 강조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당 기간별 편지 수, 편지의 누적치, 주당 평균치, 주요 주제를 분석했다. 원자료인 「편지 여론」 1, 2호는 보름 단위, 3~5호는 한 달 단위, 6호부터는 한 달 보름 단위로 편지를 집계해서 분석했다. 1~3호는 민간정보교육국에 도착한 편지만을 분석했고, 4호부터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온 편지들을 모두 분석했다.

〈표1〉의 「편지 여론」 주제 구분 방식에 대해서 먼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편지 여론」의 주제 구분은 시기별로 또는 작성자별로 출입이 있다. 예를 들어 「편지 여론」 1호의 주제 구분은 ‘점령군과 그 정책’, ‘일본정부’, ‘천황(제)’, ‘교육’, ‘개인적 요청’, ‘전쟁과 군국주의’, ‘전범’, ‘경제’, ‘종교’의 9가지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점령군과 그 정책’, ‘일본정부’, ‘천황(제)’, ‘교육’, ‘개인적 요청’, ‘전범’, ‘종교’ 등은 용어상의 사소한 변화는 있지만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경제’는 7호부터 ‘식량’, ‘금융’, ‘농업’, ‘공업’과 ‘상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전쟁과 군국주의’는 5호에서 ‘세계평화’와 같은 항목에 추가되며, 7호부터는 ‘평화와 군국주의’

로 바뀐다. 또 4호부터 주제 구분에 ‘귀환’과 ‘사회문제’가 추가된다. ‘언론’도 5호부터 추가되었다. 7호에서는 주제가 더욱 세분화되어서 모두 18가지로 구분되었고, 이는 조사보고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 구분이었다. ‘공산주의’는 7호에만 한 번 나오고, 9호부터 ‘천황제’와 함께 ‘일본정부와 정치’ 항목에 포함되었다. 앞의 <표2>는 「편지 여론」 주제 구분의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한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편지 여론」 호수를 가리킨다.

주제 구분의 변화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편지 여론」은 해당 기간 중 편지들이 가장 많이 다룬 주제를 일정한 주제 범위로 나타내고, 편지 내용과 강조점에 따라 그때그때 주제 구분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동시에 이러한 항목 구분은 점령당국이 조사하기를 원한 여론 주제들을 반영했다.

어떤 사람들이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편지를 보냈을까? 민간정보교육국의 분석대로 발신자의 배경을 알 수 없지만, 「편지 여론」 7호의 분석관 스카티 마츠모토(Scotty Matsumoto)는 편지의 서명과 신원 확인 가능한 편지들을 분석한 뒤 발신자를 구분했다.⁵⁾ 「편지 여론」 7호가 분석한 편지 1,761통 가운데 신원 확인 가능한 편지는 남성이 1,033통(58.7%), 여성이 264통(15.0%)이고, 가명을 쓴 편지가 263통(14.9%), 익명의 편지가 201통(11.4%)이었다.⁶⁾ 흥미 있는 것은 발신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편지가 전체의 1/4 가량 된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편지를 보냈는지 의문이다. 개인적 불이익을 염려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일까? 전범, 군국주의 성향의 공직자와 경찰에 대한 고발 등 투서 성격의 글이 많았던 사정, 여전히 많은 편지들이 점령군이 철수하면 군국주의자, 반동적 관리들이 복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필자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관은 서명 분석을 통해 여성이 보낸 편지를 20.4%로 추정했고, 지역별로는 도쿄 지역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1/4(23.1%) 가량을 차지했다. 여성 편지의 비중이 상

5) 전체 보고서 가운데 분석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보고서는 이것뿐이다. 이 보고서는 민간정보교육국 분석조사부(Analysis and Research Division)의 「보고서 기록」(Report Record)이 남아 있고, 이 서류에 분석관 이름이 나와 있다.

6) 「편지 여론」 7호, 1946. 8. 31, p. 5.

당한 것도 흥미 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발신자들 가운데 남성 필자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학생 55, 귀환자 46, 교사 32, 조선인 20, 농민 20, 기독교도 12, 불교도 5, 의사 5, 제대군인 4, 시장·도지사 4, 학교 교장 3, 노동자 3, 중국인 2, 기타 남성 필자 822명이었다. 여성은 귀환자 17, 학생 11, 기독교도 3, 기타 여성 필자 233명이었다. 가명 필자가 보낸 편지는 ‘시민’ 52, ‘무명인’ 43, ‘학생’ 37, 조직과 단체 37, ‘인민’ 18, ‘부모’ 18, 회사·상사 15, 조합 5, ‘전재민’ 4, ‘일본인’ 4, ‘공산주의자’ 3, ‘애국자’ 2, ‘주민’ 2, 기타 23통의 순이었다. 신원 확인 편지의 경우 기타 필자가 사실상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또 뚜렷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필자가 밝힌 신원을 그대로 집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으로 어떤 추론 가능한 경향성을 추출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체로 정부 관리, 식자층에서부터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보낸 편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만 직업을 밝힌 사람들 가운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편지의 형식은 전체적으로 편지, 엽서, 장황한 원고 등 다양했다. 편지들은 전반적으로 맥아더 장군 또는 점령당국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향한 청원, 탄원, 진정, 투서, 고발의 성격이 강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식량난, 귀환 등 개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주제가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취급되었다. 「편지 여론」의 표현을 빌리면 ‘대부분의 편지들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청, 관찰, 의견, 그리고 명확하고 즉각적인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편지는 민심의 분포나 대중적 관심의 소재를 읽을 수 있는 척도 구실을 했고, 이러한 사정이 점령당국으로 하여금 편지를 예의 분석하여 점령통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만들었다.

2) ‘개혁’, ‘식량’, ‘귀환’

발신자의 지역적 분포를 분석한 보고서는 몇 건 있지만 발신자의 신원을 집계한 「편지 여론」은 7호가 유일한데, 이 보고서가 다룬 시기는 1946년 6월 1일부터 7

월 15일까지로 그 이후부터 편지 수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한다. 늘어난 편지의 대부분은 해외 일본인 귀환에 관한 청원의 성격을 띠고, 계속해서 「편지 여론」 8호부터 이 주제가 일본인 편지 가운데 항상 수위를 차지하며, 편지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편지 여론」 7호가 분석한 시기는 ‘귀환’이 다른 주제를 압도하기 이전의 동향을 반영하는 셈이고, 그 시기 이전과 이후는 편지 수, 편지 주제, 그리고 그 성격의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1946년 7월 중순 이전의 시기에도 ‘귀환’과 ‘경제’가 편지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임에 틀림없지만 7월 중순 이후처럼 그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 1946년 7월 중순 이전 편지들 가운데 귀환과 식량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편지의 1/4에 못 미쳤고, 점령군과 그 정책, 일본정부와 일본정치, 천황제, 전범 등이 중요한 주제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편지 여론」 8호부터는 귀환만으로도 전체 편지의 3/4에 육박하고, 그 후에도 귀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한다. 그런 면에서 1946년 7월 이후 편지 수의 증가는 일본인의 귀환을 바라는 가족, 친지, 친구, 또는 일본인 귀환과 관련한 단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무렵부터 편지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어떤 면에서 편지 쓰기가 보다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편지 여론」 8호는 ‘특정 주제, 특히 귀환, 노동관계, 일본정부와 정책에 관한 의견·요구사항의 유사성은 점령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조직적인 편지 쓰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을 지적했고, 9호 보고서는 ‘전체 편지 가운데 약 70%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집단이 썼다’고 분석했다. 분석관들은 이 무렵부터 ‘상당수의 편지들이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조직된 것으로 보이고, 관심이 집중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소한 감정을 표현하는 편지들이므로 독자들이 이 편지들에 기초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경고’했다.⁷⁾ 편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민원(民願)의 성격이 강화되거나 특정 조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46년 11월에 작성

7) 「편지 여론」 8(1946. 11. 8), 9(1946. 11. 26), 10(1947. 4. 17)호 서문 참고.

된 「편지 여론」 9호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편지가 ‘신문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⁸⁾ 점령당국은 편지를 통해서 여론 동향을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의 성격 변화 역시 예민하게 감지했다.

「편지 여론」 9호는 편지를 수신처별로 분류했는데, 그것에 의하면 1946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온 편지 6,339통 가운데 주일 미국 대사 조지 애치슨(George Atcheson, Jr.)에게 온 편지가 3,967통으로 맥아더 장군에게 온 편지 1,558통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다른 시기에는 맥아더 장군에게 온 편지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현상은 대단히 예외적이었다. 애치슨에게 온 편지들은 3통을 제외하고 모두 귀환과 관련되었다. 이것은 발신자들이 귀환 문제는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 소관이 아니라 소련과 외교를 담당한 외교당국이 처리할 업무이고, 따라서 주일 미국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귀환 관련 청원은 많은 부분이 소련 점령 지역인 만주, 북한에 있는 일본인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대량의 편지는 미국 정부와 미군 점령당국에 소련 점령지역 포로 귀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일종의 압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편지 여론」 4호는 ‘경제’를 다룬 편지들이 재벌 문제나 경제 이론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⁹⁾ 〈표1〉에 나타난 ‘경제’를 주제로 한 편지들은 거시적인 경제구조상의 문제를 다루었다기보다 발신자 개인의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패전 후의 어려운 경제사정, 특히 식량난에 대한 호소가 가장 많았다. 「편지 여론」은 7호부터 경제를 ‘식량과 생활조건’, ‘금융’, ‘농업’, ‘공업과 상업’, ‘교통과 통신’ 등으로 세분했고, 바뀐 주제 구분 안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틀은 그 후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편지 여론」에 의하면 5호, 6호에서는 ‘경제’를 주제로 한 편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7호, 8호에서

8) 「편지 여론」 9호, 1946. 11. 26, pp. 1~2.

9) 「편지 여론」 4호, 1946. 3. 25, p. 7.

는 ‘식량’을 주제로 한 편지들이 두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9호, 10호에서는 네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5호, 6호의 ‘경제’도 식량 사정의 개선과 동결 자산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46년 초부터 여름까지는 식량난이 편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진 주제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은 미군 점령기간 중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였고, 또 세타가야(世田谷) 사건, 반미(飯米) 획득을 위한 궁성 앞 식량메이데이 데모 등 식량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식량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은 때마침 미국으로부터 도착한 구호 식량이었다. 이 사실은 일본인들 사이에 맥아더와 점령당국만이 식량위기라는 절박한 현실에 대해 노력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맥아더와 점령군의 인기와 위신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⁰⁾ 「편지 여론」 7, 8호에 나타난 ‘식량’을 주제로 한 편지들 가운데 각각 25%, 53.5%가 이 시기 제공된 미국의 식량 원조에 대한 감사 편지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은 개인들의 일신상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 가장 많았다. 1946년 봄, 특히 5월과 6월은 식량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고, 이 주제를 다룬 편지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1946년 중반 이후 해외 일본인의 ‘귀환’ 청원 편지가 압도적 비중을 점하기 이전에는 천황제, 일본정부, 전범, 교육 등의 주제들도 편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내용도 일본 사회의 개혁에 강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의 「편지 여론」은 ‘대부분의 편지들이 일본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일본 사회에 필요한 개혁을 구체화’했고, 이것은 그 시점에서 ‘개혁이 모든 일본인에게 가지는 압도적 중요성 때문이거나 또는 개혁에 대해 개인들이 실망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후자의 경우 그들의 의견은 일본 사회의 평균적 의견보

10) 세타가야 사건, 식량메이데이 데모의 전개과정과 그에 대한 천황과 점령군의 대응, 일본인들의 반응과 여론에 대해서는 川島高峰, 『敗戦：占領軍への50万通の手紙』, 262~294쪽 참고.

다 강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¹¹⁾ 점령 직후 1년여의 기간은 천황제, 군국주의자 추방, 헌법 개정, 전범 처벌을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전후 일본 정치구조의 골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논의들과 점령군의 이른바 전후개혁이 일본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형성했고, 편지들은 그 의제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반응했다.

3. 일본인 편지에 반영된 사회상과 사회의식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은 대체로 패전 직후 일본인의 처지와 생활상의 요구를 즉자적으로 반영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편지 내용의 변화 추이를 세밀하게 관찰하면 같은 주제의 편지들이라도 시기에 따라 서술 내용의 변화, 뉘앙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또 시기별로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편지를 통해 민심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편지가 다룬 주제와 내용의 계량화뿐만 아니라 해당 시점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연동하는 편지 내용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전후개혁

「편지 여론」 주제 구분 가운데 '점령군과 그 정책'은 점령당국이 가장 주의 깊게 살핀 항목 중 하나였다. 이 주제에 대한 편지들의 반응은 점령 전(全)시기에 걸쳐 전체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심지어 편지들 가운데에는 미군의 장기 점령을 요구하는 편지들이 많았고, 일본을 미국의 속국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들도 있었다. 일본의 미국화 주장, 일본 국민의 미국에 대한 동경과 정서적 일체화는 점령초기부터 나타나고, 장기간 지속되었다. 장기 점령을 요구한 이유는 물론 점령군이 철수하면 군국주의자, 반동관료들이 복권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편지에 나타난 점령군에 대한 우호적 의견과 일본정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대비는 조사 전시기에 걸쳐 매우 선명하게 나타났다. 점령당국에 대한 우호적 의

11) 「편지 여론」, 1~6호, 서문 참고

견과 맥아더 장군에 대한 예찬, 그러한 반응에 대한 사회심리적 분석과 정치·사회적 맥락의 분석은 소데이와 가와시마의 책에 잘 나와 있다.¹²⁾ 점령당국은 비우호적 의견에도 주의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점령정책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기보다 미군 병사의 암거래 관여 등 지역적인 사항에 대한 비판이나 개인적 불평의 경우가 많았다.¹³⁾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비우호적,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패전 이후 일본인들 사이에서 군국주의에 대한 혐오감과 군부, 정부 관리, 경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것을 감안하면 편지에 나타난 이런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치·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듯 대체로 편지들은 일본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과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했다. 특히 편지들은 정부, 경찰, 학교와 교육제도 개혁이나 관리, 대의사(代議士), 경찰, 통치기구의 말단을 형성했던 정(町), 촌(村), 인조(隣組) 우두머리 숙청 문제에 강렬하게 반응했다.

‘천황제’는 1946년 초반까지 꽤 많이 취급된 주제였으나, 천황의 인간 선언, 헌법 개정 논란을 거치면서 신속하게 정리되었고, 「편지 여론」 9호부터 ‘일본정부와 정치’에 포함되었다. 편지에 나타난 천황제에 대한 의견은 당시 일본 사회의 평균적 의견보다 비판적이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식량만 충분히 배급한다면 천황은 폐지해도 된다”고까지 적고 있다.¹⁴⁾ 신문 여론조사는 천황제 유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나타냈지만 「편지 여론」에서는 천황제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은 시기도 있고, 비판과 지지가 비슷하게 나올 때가 많았다.¹⁵⁾ 가장 빈번한 비판은 천황이 군국주의의 수단이고, 온상이라는 것이었지만 노골적인 천황제 지지도 적지 않았다. 천황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천황의 퇴위 정도로 그치고, 천황을 비정치화시켜 존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 여론을 대표한 것

12) 「편지 여론」 각 호의 ‘점령군과 그 정책’ 항목 및 袖井林二郎, 「拜啓マッカーサー元帥様 — 占領下の日本人の手紙」, 1, 6~8장; 川島高峰, 「敗戦: 占領軍への50万通の手紙」, 3, 5장과 「マッカーサーへの投書に見る敗戦直後の民衆意識」, 21~22쪽 참고.

13) 袖井林二郎, 「拜啓マッカーサー元帥様 — 占領下の日本人の手紙」, 3장 참고.

14) Box 994, 오우치 하나코(大内花子), 1945. 12. 6.

15) 「편지 여론」, 각 호의 ‘천황제’ 항목, 특히 1, 2, 5, 6, 7, 9호 등 참고.

과 마찬가지로 편지에서도 새롭고 평화로운 일본 건설을 위해 천황에 의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¹⁶⁾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과 '상징천황제'의 확립 과정, 그것이 일본의 전후역사에서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 연구들에 의하면 일본 지배층의 종전대책이 '국체호지'(國體護持)로 집중되었고, 미국이 점령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천황제 유지를 원했으며, 이러한 양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속에서 이른바 '동경재판'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이 면책되고 최종적으로 헌법 제정을 통해서 상징천황제가 확립되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존 다우어의 표현을 빌리면 상징천황제의 확립은 'SCAPinization'과 '천황제 민주주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윤건차는 "쇼와천황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재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본인 전체의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하고, 민족으로서 '일본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¹⁷⁾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상징천황제가 일본의 전후개혁 자체를 불철저하게 만든 구조적 한계로 작용했다는 점을 환기시키지만 전후 일본 사회의 존재형태와 관련해서 전후개혁의 역사적 성격을 살피고자 할 때,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보통의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치개혁과 사회 민주화의 실상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편지에 나타난 일본 민중의 전후개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매우 높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비판은 특히 통치기구의 말단과 지방 사회에서 개혁의 불철저성에 모아졌다. 「편지 여론」은 일본인의 정치적 태

16) 川島高峰, 「マッカーサーへの投書に見る敗戦直後の民衆意識」, 25쪽 및 「日本の敗戦と民衆意識 — 天皇制ファシズムから天皇制デモクラシーへ」, 『年報日本現代史 創刊号: 戦後50年の史的検証』, 1995; 「편지 여론」 2, 「천황제」 항목 참고. 가와시마의 연구는 천황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논리를 편지 내용 분석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

17) 미국의 일본 점령사 전반에 대해서는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W.W. Norton & Co., 1999 및 Takemae Eiji,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ew York: Continuum, 2002 참고.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주로 尹健次, 「『帝国臣民』から『日本国民』へ — 国民概念の変遷」, 中村政則, 天川晃, 尹健次, 五十嵐武士 編, 『戦後日本 占領と戦後改革 5: 過去の清算』, 岩波書店, 1995; 박진우, 「패전 직후의 천황제 존속과 민중」 및 「패전 직후 천황제 존속과 재일조선인」,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참고. 인용은 John W. Dower, *Embracing Defeat*, 3·4부 및 尹健次, 「『帝国臣民』から『日本国民』へ — 国民概念の変遷」, 59쪽.

도를 주로 점령정책, 일본정부, 천황제 등의 일반적인 범주로 나누어 파악했고, 또 점령당국의 여론조사는 점령정책과 일본정부에 대한 태도를 분리해서 양자를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그러나 일본 민중이 실제 개혁의 진행과정과 그 실상을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분석할 때 그렇게 일반화한 범주로 개인의 의견을 해소시키는 것은 결코 적절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미군 점령통치가 일본정부를 통한 간접통치의 형식을 취했지만 점령통치와 전후개혁의 평가에서 점령당국과 일본정부로 주체를 나누어 그 공과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유효할지 의문이다. 일본의 민중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은 천황이나 점령당국, 일본정부 일반이 아니었고, 여전히 정·촌장, 경찰 등 말단 통치기구의 관리들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그 기구들의 작동방식에 대한 민중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편지 A] 관리 오할(五割) 감원에 관한 건. 지방행정기관 및 작업관청, 각 대공장, 은행, 상선회사 등의 중간관리와 이에 준하는 회사원 및 은행원들이 전쟁 중 군과 결탁하여 하급자 또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또는 경찰, 부청, 현청 등과 연락하여 행한 악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종전 이후에는 위와 같은 행동이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또 정회장(町會長), 정(町)경제부장 등이 이에 관련되어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물품을 은닉했습니다. 예컨대 담배를 취급하는 전매국 관리는 국민에게 배급해야 할 담배를 자기 자신의 주식물(主食物)과 교환하여 사유화하고, 군용미, 설탕, 유류 등을 모아서 몇 십만 엔이라는 축재를 자행한 사람들은 아사지경에 있는 국민을 오히려 불가사의하게 보고 있으니 이는 언어도단아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민주주의와 맥아더 원수의 선량한 시정에 반하는 일입니다.(渡部正義, 1945. 12. 4, Box 231)

[편지 B] 인조(隣組)는 지나사변(중일전쟁—인용자) 중의 산물이지만 대동아전쟁에 이르러 활동이 가장 컸다.…… 상의하달(上意下達), 하정상통(下情上通)의

기관이라는 선전은 구실일 뿐 순수한 전쟁 동원 기구 역할을 했다. 식량배급의 하부기구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정회 임원, 배급소 관계자가 군부를 배경으로 위세를 부렸고, 그들은 지금도 의연 그 지위에 있다.(春田哲雄, 1946, 1.7, Box 994)

편지 A, B는 민중들이 공직자 추방 등 점령군에 의해 수행된 전후개혁을 불철저하다고 느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공직추방령(公職追放令)의 불철저한 시행과 소위 ‘특권계급’의 온존에 대한 비판은 많은 편지들에서 나타난다. 익찬운동(翼贊運動) 등 과거 일본정부의 정책, 국책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경찰이었고, 그 말단에서 활동한 것이 정회장(町會長)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공직 추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편지 B는 사회통제 체제의 최하단에 위치한 인조(隣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정익찬회(大正翼贊會), 식량영단과 함께 통치 기구 말단을 차지했던 이 기구가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많은 편지들이 경찰 내 특고(特高)는 말단의 몇몇 순사들 외에는 대개 다른 사무로 전직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서 그대로 온존되었음을 지적한다.¹⁸⁾ 점령당국의 군벌 해체와 공직으로부터 군국주의자 추방은 전후 개혁의 출발점이었으나 이러한 편지들은 그러한 조치의 개혁성을 체감하지 못한 민중이 많았음을 증명한다. 민중은 주위에서 익숙하게 보아 온 경찰, 정회장 등 일본제국 지배질서의 말단 기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특권계급’이 온존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불만은 1947년의 국회의원 선거국면까지 이어진다. 구마모토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1947년 3월에 보낸 편지에서 지방에서는 선거가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후보들이 과거와 현재의 관료적,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 추천되고 뽑힌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가나가와에 거주하는 이타테 닌타로는 편지를 통해 1947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정·촌장들을 먼

18) 荒敬, 『日本占領史研究序説』, 柏書房, 1994, 1장 1절 참고.

저 선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되지 않으면 마을 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 편지들과 비슷한 시기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에는 이타테의 편지처럼 선거 이전에 마을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가 다수 나타난다.¹⁹⁾

이 편지들은 구 지배층이 오히려 선거 등 이른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부활하고 복권되는 것을 일본인들이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지켜보았음을 드러낸다. 점령 하에서 군국주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혐의를 받은 일부 기구가 폐지되는 등 제도 자체는 새로운 외피를 쓰게 되었지만 과거의 사회체제를 지탱하고 운영하던 주체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행정·대의기구에서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빈번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편지에서는 점령 초기부터 강한 사회개혁 요구가 지속적으로 분출되었다. 특히 천황제 폐지와 군인, 관리, 대의사, 경찰 등 공직자 숙청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정(町), 촌(村), 인조(隣組), 재향군인회, 경방단(警防團) 등 실제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회구조 하부의 통제 기구들에 대해 강한 개혁 요구가 존재했다.

편지에는 언론(신문), 사법 기구, 교육계에 대한 숙청요구와 개혁요구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언급된 주제다. 「편지 여론」 7호를 통해 학생, 교사들의 편지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교사들 또는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일본의 교육제도 개혁, 학교로부터 군국주의 청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구척식(舊拓植)대학의 한 학생이 작성한 1946년 3월 31일자 편지는 척식대학이 군국주의자, 식민주의자들의 해외 식민사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런 학교는 패전 후에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이름을 홍릉(紅陵)대학으로 바꾼 뒤, 이전의 식민사를 동양사로 이름을 바꾸어 가르치는 등 패전 이전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음을 고발하면서 침략주의의 근본을 없애

19) 구마모토 현 시모마치 군 거주 후쿠다 다케이치(福田武一)의 편지(1947. 3. 27); 가나가와 현 아이코 군 거주, 이타테 닌타로(伊建仁太郎)의 편지(1947. 3. 8) 및 폴더 Vol. 14의 편지들 참고. 모두 Box 996.

기 위해 폐교를 요구하였다.²⁰⁾ 이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패전 이전의 군국주의 교육에 대해서 학생이고, 교사고 상당한 불만과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교육제도, 교육이념상의 군국주의 잔재와 그것의 개혁 방안에 대한 제안, 군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교사에 대한 고발은 조사 전 시기를 통해 계속 이어졌고, 편지들이 다른 주제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언론의 전쟁 협력 사실과 언론계의 군국주의자에 대해서도 점령 초기부터 고발 편지가 끊이지 않았고, 비판적인 논조의 편지가 많았다.

일본인 편지에 나타난 '전후'는 어찌 보면 모순에 가득 차 있고 이율배반적이라는 느낌까지 든다. 패배를 겨안고 점령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의 적국이었던 미국을 예찬하고 정서적 일체감까지 표명한다. 또 일본의 지배층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천황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낸다. 전범과 전쟁책임자들에 대한 고발과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빗발치는가 하면 어느 순간 온 사회가 슬그머니 전쟁책임을 부정해 버린다. 점령당국에 대한 순응과 신뢰, 일본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의 일상이 존재했고, 그 일상생활에서 일본인들의 전후개혁에 대한 불신과 비판, 냉소는 컸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점령당국에 전적으로 의지해 사태를 개선하기를 바랐다. 「편지 여론」은 국제적 문제에서 지방의 문제, 또 순전히 개인적인 일까지 점령당국에 대한 현저한 의존을 감지했다. 편지에서는 일본정부와 그 관리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편지 여론」은 이것이 일본인들이 점령당국에 빈번히 청원을 보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²¹⁾ 전후 개혁과 민주화가 일본인 자신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점령당국에 의해 주도되자 그 개혁과 민주화는 미국의 일본 점령 목적에 종속되거나 점령당국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선별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구체제와 비교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거나 기꺼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20) Box 234, 구척식(舊拓植)대학 학생, 1946. 3. 31

21) 「편지 여론」, 10호, 1947. 4. 17, 서문

2) 전쟁책임

‘전범’으로 주제 구분된 편지들은 전범 용의자 고발, 또는 전범 용의를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초기의 편지들은 정부 관리, 군인, 대의사를 가장 주요한 전범 용의자로 순서대로 지목했다.²²⁾ 이 주제 구분은 「편지 여론」 8호에서는 ‘전범과 군국주의’로 분류되었다. 「편지 여론」은 처음에는 ‘전범’과 ‘전쟁과 군국주의’ 항목을 구분했는데, 1946년 7월 중순부터 양자를 합했다. ‘전쟁과 군국주의’ 항목은 태평양전쟁과 군국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를 계측하기 위한 항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천황제, 일본정부, 전범 또는 교육 등의 주제와 내용적으로 겹쳐서 다소 애매했다. 군국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편지 여론」 1호의 경우 흥미 있게도 이 항목으로 분류된 29통의 편지가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으나 태평양전쟁으로 비난받아야 할 쪽에 대해서는 일본과 연합국으로 거의 양분된다고 지적했다. 전쟁기에 일본정부와 군부가 일본 국민들에게 태평양전쟁을 ‘자위전쟁’으로 선전하며 개전의 책임을 연합국 측에 돌렸던 만큼 그러한 선전의 영향이 전후에도 지속되었거나, 아니면 일본 국민들이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 미군 공습 등이 이른바 ‘전쟁’(戰災)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실로 인해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편지 여론」이 ‘전범’, ‘전쟁’, ‘군국주의’를 오가며 항목을 구분했지만 이 세 단어는 그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매했다. 이 세 단어에 공통한 역사를 추출한다면 ‘전쟁책임’이라는 용어로 이들을 포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도 전쟁 자체에 대한 책임인지, 패전에 대한 책임인지, 또 책임의 소재를 묻고자 한다면 전범, 단순가담자 또는 전쟁협력자의 경계가 어디인지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기존 연구는 패전 직후 제기된 히가시쿠니 노미야(東久邇宮) 수상의 ‘일억총참회론’이 ‘패전’에 대한 군인·관리의 책임을 국민 전체에 균등 분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해소시키려는 것에 불과했고, 일반

22) 「편지 여론」 1호, ‘전범’ 참고.

국민은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1945년 9월 11일 점령당국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이하 38명에 대한 전범체포령을 계기로, 즉 점령군과 국제여론이라는 외적 계기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전쟁책임론이 처음으로 일어났으며, 이로부터 국민이야말로 전쟁책임자 추급(追及)의 주체라는 주장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²³⁾

연합군최고사령부에서 전범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첩보 수집의 차원에서 전범 관련 편지를 수집하고 정리한 곳은 법무국이었다. 법무국 총무부는 전범 용의자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인 배경조사와 참고자료철’을 만들었다. 이 문서철은 사과상자 크기의 문서상자 9개에 전범에 대한 배경 조사와 전범 관련 참고자료들을 모아놓았다.²⁴⁾ 이 상자들에 보관된 전범 배경조사 문서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나 일본인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들 가운데 연합군 최고사령부 군사정보국 민간검열지대(Civil Censorship Detachment)가 검열한 뒤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들이다.

A급 전범재판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1945년, 1946년 초반만 해도 이 문서철에 소장된 일본인 편지들의 내용은 주로 일본인들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위주였다. 그리고 그 편지들의 전쟁책임, 전쟁범죄 관련 언급은 강경한 편이었다. 예컨대 A급 전범 기소가 소수에 그쳤다는 비판, 전범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청, 특히 시·군·정·촌 관리들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언론(신문), 사법기구 등의 개혁과 숙청 요구도 많았으며, 전범 고발도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²⁵⁾ 그러나 B·C급 전범재판이 본격화된 1946년 중반 이후 점령군을 향한 일본인들의 편지나 점령당국이 검열한 서신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수마트라 등 연합군 점령지역에서 진행

23) 山田昭次, 「八・一五をめぐる日本人と朝鮮人の断層」, 『朝鮮研究』 69, 1968년 1月号, 6~7쪽; 패전 이후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전쟁책임론의 전개, 전쟁책임론과 역사인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吉田 裕,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1995(요시다 유타카 지음, 하종문·이애숙 옮김,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2004) 및 家永三郎, 『戦争責任』, 岩波書店, 1985(이에나가 사부로 지음, 현명철 옮김, 『전쟁책임』, 논형, 2005) 참고.

24) 각주 2의 문서철 소개 (3) 참고. 이하 이 법무국 문서철은 ‘일본인 배경조사와 참고자료철’로 표기. 이 문서철은 소장 문서를 ‘Ja-19-일련번호’로 분류하여 시기별로 정리해 놓았다.

25) ‘일본인 배경조사와 참고자료철’, Box 994, 995의 1945년, 1946년 초 편지들 참고.

중인 일본인 B·C급 전범재판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이나 이들 지역에 남아 있는 일본군 포로들의 조속한 귀환을 청원하는 내용, 또는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일본인 취급과 처우 문제 위주로 되었다.²⁶⁾ 전범을 주제로 한 편지 내용의 주된 논조도 전범 고발에서 전범 용의자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전범재판의 부당성을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전범'은 패전으로 인한 희생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편지에서는 경찰, 관료, 군인이 3대 전쟁책임자로 지목되었고, 그들이 두터운 층을 이룸으로써 천황에 대한 전쟁책임을 눈가림하는 구실을 했다. 그들을 전쟁책임자로 지목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전범재판과도 관련해서 현실에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였다. 가와시마는 군인, 관료, 경찰의 전쟁책임을 둘러싼 편지들의 경계선 구분에서 공통된 것은 그것이 전쟁수익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준은 군국주의나 비민주적 가치에 대한 비난으로서 설정된 것이 아니었고, 전쟁수익자에 대한 비난과 자기비판의 결여로 나타났으며, 평화에 대한 죄와 침략행위에 의한 가해 인식을 희박하게 했다는 것이다.²⁷⁾ 또 요시다 유타카는 이 시기 일본인의 전쟁관이 지배자는 가해자, 국민은 피해자라는 단순한 도식에 의해 지배되었고, 일본 국민 사이에 '피해자론'의 확산은 지배층의 타민족 침략과 식민지화의 가담자로서 국민의 책임에 대한 자각을 봉쇄했다고 지적한다.²⁸⁾ 이러한 지적은 이후 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 용의자들의 자기 항변 논리와도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전쟁책임을 회피, 전쟁책임 부정론으로 연결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B·C급 전범 용의자들의 아래 편지는 이런 지적을 마치 증명하는 듯하다.

26) '일본인 배경조사와 참고자료철', Box 995, Folder vol. 11, 12 및 Box 996, Folder vol. 15~18의 일본인 편지 및 서신 검열 보고서 참고.

27) 川島高峰, 「マッカーサーへの投書に見る敗戦直後の民衆意識」, 25~28쪽.

28) 요시다 유타카는 '지도자책임관'의 형성이 국민자신의 전쟁협력과 전쟁책임을 문제에 관한 내성적(內省的) 물음을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이 문제를 탁상공론으로 만드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많은 국민은 '지도자책임관'을 소극적인 형태로 수용하는 한편, 자기 자신의 전쟁협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국주의적인 지도자에 '속았다'고 하는 논리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납득시켰다는 것이다. 吉田 裕, 「戦争責任と極東国際軍事裁判」, 中村政則·天川晃·尹健次·五十嵐武士 編, 『戦後日本 — 占領と戦後改革 5 : 過去の清算』, 85쪽.

[편지 C] 천황은 모든 전쟁범죄로부터 무죄라고 한다. 왜 그런가? 그는 그의 신하들이 그의 명령은 지상명령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그들의 의무를 수행했고, 또 국가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 전범으로 차례차례 사형 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까? A급 전범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민족의 아버지로서 해외에서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C급 전범들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는가? 그가 그런 동정적 태도를 취할 때만 일본국 헌법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천황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Ja-19-4084, 마닐라 포로 수용소의 사토 소가 아내 사토 요시코에게, 1947. 10. 27, Box 996)

[편지 D] (극동)군사재판은 승자에 의한 패자 재판이다.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을 것이 틀림없다. 그 결과 죄수(포로—인용자)들을 몇 번 구타했을 뿐인 사소한 범죄자들이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끌고 간 A급 전범들보다 중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Ja-19-4094, 수가모 감옥의 오시마 노리마사가 오시마 츠루에게, 1947. 11. 30, Box 996)

[편지 E] 10년 이상 일부 일본 군인들이 중국에서 전쟁 때문에 비행을 저질렀고, 나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비난받았다. 나는 다른 군인들과 협조하여 한 중국인을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나는 작전 중 명령에 따라 중국인 밀정들을 체포했을 뿐이다. 나는 비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전범이 되었다. 내가 무죄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재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Ja-19-4091, 중국 핑똥(Canton) 제 1수용소의 마쓰야마 요시헤이가 교토의 마쓰야마 데루코에게, 1947. 10. 5, Box 996)

편지 C는 B·C급 전범이 천황의 지상명령을 수행한 수행자에 불과하다며 그들을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천황을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이 일본 국민, 일본 사회 전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심리적 토양을 제

공했음을 잘 보여 준다. 패전으로 인해 재판정에 섰을 뿐이라는 편지 D는 군사재판의 의의 자체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고, 또 C와 함께 하급 지휘관과 병사들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편지 E는 뉘른베르그재판과 도쿄재판에서 정식화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를 무색하게 한다.²⁹⁾ 이는 전쟁 범죄에 대한 개인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법리라고 평가되지만 편지 E의 필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여지는 없어 보인다. 물론 B·C급 전범들의 경우 사례 하나 하나를 엄밀하게 조사해서 용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의 편지들이 B·C급 전범 혐의자들의 심리적 태도를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또 그들과 관련된 가족, 친구, 친척들도 전범 혐의자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가졌다면 일본 사회 또는 일본국민 전체적으로 전쟁책임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지의 전범 논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편지 여론」의 ‘전쟁과 군국주의’ 항목 자체가 이후 ‘전쟁, 군국주의, 그리고 세계평화’, ‘평화와 군국주의’ 등으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전범’ 항목과 합쳐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의 전쟁, 즉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규정된 태평양전쟁으로부터 미·소 냉전 하의 세계평화 문제로 편지 내용이 바뀌어 간 것을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점령당국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편지 여론」에서 ‘전범’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그것을 보다 추상적인 ‘군국주의’, ‘평화’와 같은 용어들이 대체했으며, 이러한 용어들이 냉전 하의 미·소 대립을 전제로 하여 구사되기 시작하였다. 미·소가 만들어 낸 냉전구조가 전쟁책임을 둘러싼 일본인들의 의식을 구속하게 된 것이다.³⁰⁾

천황의 면책을 도모한 황실을 비롯해 일본 지배층은 종전 당시부터 반공주의를 매개로 노골적으로 미국의 대소 대결의식을 자극하면서 점령당국에 접근했

29) 荒井信一, 「戦後補償と戦後責任」, 中村政則・天川晃・尹健次・五十嵐武士 編, 「戦後日本 ― 占領と戦後改革 5: 過去の清算」, 243쪽.

30) 川島高峰, 「手紙の中の『東京裁判』 ― 私検検閲・マッカーサーへの投書に見る『戦犯裁判』と民衆」, 『年報日本現代史』第13号, 現代史料出版, 2008, 233쪽.

고, 그것은 조선총독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한편으로 일본 국내에서 사회혁명,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혁명에 대한 공포와 우려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전후 국제질서의 한 축을 담당할 미국의 힘에 의지해 남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본 지배층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냉전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의식은 일본의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확산되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편지는 미·소 대결을 전제로 한 냉전인식이 꽤 이른 시기부터 일본국민들 사이에 존재했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 냉전구도 하에서 미국에 적극 편승하는 방식으로 전후 부흥을 도모한 일본 지배층의 생각에 공명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보여 준다.

가네자와(金沢)시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다케오(渡部武雄)는 1947년 1월 27일 맥아더 장군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발송했고, 이를 1947년 3월 11일 다시 맥아더 사령부와 각 정당 의원, 주일 소련·영국·중국 대사, 신문사에 전달했다.³¹⁾ 그는 이 편지에서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와 일본의 재건 방향, 그리고 식민지 인식과 관련해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 편지는 ‘총론, 미·영 양국이 세계를 통일하는 방책, 일본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 독일·이탈리아·핀란드 기타 주변 제민족에게 보내는 호소, 미국 지도자 및 여론을 향한 호소, 조선민족에 고한다, 소련민족에 고한다, 기타 각 국에 고한다, 국제연합국(안)’의 총 8개 절로 이루어진 논리 정연한 글이다. 이 편지는 전후 국제질서 수립방향을 미국이 원자탄 독점을 유지하면서 영국과 연합하여 소련을 굴복시키는 데 두고, 일본이 이를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몇 개의 요구사항으로 요약했다.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의 폐기,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 이전 상황으로 복귀, 일본정부에 명하여 지원자들로 육군 부대 또는 기타부대를 재편성하여 조선, 만주 각지에 주둔시킬 것, 해외 인양자들의 종전 무렵 각지로 복귀, 군사재판은 속행하나 전범자 처벌은 연기, 실제 (미·영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점령지는 각 국 영토로 할 것, 즉 일본도 점령지의 일부를 할양 받을 것 등이 그 내용이다. 노골적인 대소 적대

31) Box 232, Tab 8 Doc 29203 및 Box 235, Tab 42 Doc 27162. 1947년 1월 27일자 편지는 영문 요약만 남아 있다.

의식을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장한 이 편지는 발송 시점과 패전국 일본의 처지, 당시 국제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주장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당시 일본인들이 일본의 부흥과 국제사회 복귀의 조건들을 어떻게 구상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 편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꽤나 의미심장해진다.

필자의 구상이 가진 주요한 특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후 냉전 질서 수립에 일본이 적극 편승하거나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과 그를 위해 전전 일본이 유지했던 식민지 질서의 회복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패전 후 채 2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전후의 국제정세 변화를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일개 국민이 공유하면서 그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필자의 주장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냉전이 격화하면서 미국의 대일정책이 일본의 재부흥, 단독강화,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나아갔던 것을 감안하면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미국정부와 점령당국, 그리고 일본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을 간파하거나 선취한 감이 없지 않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 구상이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전전 일본의 식민지 질서 회복을 요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편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냉전질서 수립이 일본의 부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가 회석되거나, 회피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예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편지는 별도의 절을 할애하여 ‘조선민족에게 고’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편지 F] 종전 후 독립의 영예를 얻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한 자는 일부일 뿐이고, 일반 인민은 빈곤한 자가 다수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의해서 병합되어 안정을 얻어 살던 때가 행복했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미군진주 후 맥아더 사령부의 시정방침, 즉 정의·관용·이해 기타로부터 배운 바 많

고, 이를 모범으로 하여 종래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해서 진실로 공존공영의 열매를 거둘 필요성을 충분히 깨달았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와타나베 다케오 渡部武雄, 1947. 1. 27, Box 232)

이 편지는 ‘태평양전쟁은 이기적이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범 처벌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그런 면에서 이 편지에서 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죄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또 이 편지는 그 이전의 식민지 침략에 대한 비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부채의식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편지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예찬하는 입장에 있고, 일본인은 전후 점령군의 시정방침을 따라 전전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벗어났음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인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멸시를 드러낸다. 패전 이후 일본인들에게 태평양전쟁과 그 이전 일제의 식민지 침탈, 중국 침략을 분리시켜 사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그 시기 일본인들 사이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은 희박하거나 아예 시야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천황의 전쟁범죄 면책은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전쟁책임을 회색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피해자론’에 입각해 일부 전쟁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스스로는 손쉽게 전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 사회의 전쟁책임에 대한 자기비판의 결여를 일본국민의 정치적 성숙도 문제로 파악한 연구들이 있다.³²⁾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지적에 앞서 당시 시점에서 전쟁책임과 진지하게 대면하는 올바른 사회적 실천 양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역사가의 때늦은 지혜로 보면 점령당국과 지배층의 태도, 전후 사회운동 역량의 한계 등으로 그 당시 일본 사회 스스로 전쟁책임을 자각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기준을 좀처럼 수립할 수 없었다.

32) 川島高峰, 「マッカーサーへの投書に見る敗戦直後の民衆意識」, 28~29쪽; 山田昭次, 「八・一五をめぐる日本人と朝鮮人の断層」, 12쪽.

그런 상태에서 국민 개개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양식이란 자신의 생활상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즉자적인 감정의 분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재일조선인

앞에서 패전 직후 일본의 전쟁책임 논의나 그에 대한 인식이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에 한정되었고, 그 이전의 아시아 각 국에 대한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한 동경 재판 자체가 설정한 한계이기도 했다.³³⁾ 전후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인식과 정책, 재일조선인 사회의 존재형태, 일본 사회의 재일조선인관에 관한 연구들 역시 전후 일본 사회의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지적한다. 또 그 연구들은 패전 직후 일본 사회의 재일조선인관을 규정하는 데 일본정부와 점령당국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상징친왕제의 확립,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 책임의 방기, 그리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제도화·구조화는 동전의 양면이었다.³⁴⁾

이하에서는 편지를 통해서 패전 직후 일본 사회의 재일조선인관을 좀더 구

- 33) 吉田 裕, 『戦争責任と極東国際軍事裁判』, 69~76쪽. 또 윤건차는 전후의식의 출발점에서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가 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전, 전후를 막론하고 아시아 열사관이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했음을 지적한다. 尹健次, 『戦後思想の発元とアジア観』, 中村政則 等編, 『戦後日本. 占領と戦後改革 3: 戦後思想と社会意識』.
- 34) 일본정부와 점령당국의 재일조선인 인식과 정책, 패전 직후 재일조선인 역사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 아래의 목록은 본고에서 활용된 연구성과들이다. 먼저 일본정부와 미국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대해서는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 — SCAPの對在日朝鮮人政策 1945~1952』, 勁草書房, 1997; 大沼保昭, 『出入国管理体制の成立過程 1』, 『法律時報』 50卷 4号, 1978. 4; 大沼保昭,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に関する一考察(四)~(六)·完』, 『法学協会雑誌』 제97권 제2호~제4호, 1980; 로바트·리케트, 『GHQの在日朝鮮人政策』, 『アジア研究』 제9호, 和光大学アジア研究·交流 教員グループ, 1994년 3월 참고. 점령당국의 재일조선인 인식에 대해서는 小林知子, 『GHQの在日朝鮮人認識に関する一考察』,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2, 1994; 테σσα·모리스·스즈키, 『占領軍への有害な行動 — 敗戦後日本における移民管理と在日朝鮮人』, 『現代思想』 2003년 9月号 참고. 또 재일조선인의 존재형태에 대해서는 樋口雄一, 『日本の地域社会と在日朝鮮人 — 神奈川県域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7, 1999; 樋口雄一, 『敗戦直後の在日朝鮮人 — 国問題を中心に』, 『日朝関係史論』, 新幹社, 2003; 김광열, 『1940년대 일본의 渡日조선인에 대한 규제정책』, 『1940년대 전반 일본경찰의 재일조선인 통치체제』; 박진우, 『패전 직후 천황제 존속과 재일조선인』; 허광무, 『전후 일본공적부조체제의 재편과 재일조선인 — 「생활보호법」-민생위원 체제의 성립을 중심으로』(이상 김광열, 박진우, 허광무의 논문들은 모두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엔씨, 2006에 수록); 鄭榮桓, 『「解放」直後在日朝鮮人自衛組織に関する考察 — 朝連自治隊を中心に』, 『朝鮮史研究論文集』 44호, 2006; 『「解放」直後在日朝鮮人運動と参政問題 — 「正當な外国人待遇」をめぐる』, 財団法人朝鮮奨学会, 『學術論文集』 第26集, 2007 참고.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재일조선인관의 구성 내용과 존재 방식, 각 인식 내용의 시간적·논리적 선후관계와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그 열개가 제시되었지만 패전 직후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와 맥락, 즉 암시장 등 이른바 ‘사회문제’나 일본 공산주의 운동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것은 또 일본 사회의 ‘민생’과 직접 연루된 주제들인 만큼 일본 사회의 ‘바닥’ 민심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인식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노우에 후쿠조는 오사카(大阪)시 히가시(東)구에 주소를 둔 관리다. 그는 점령군이 일본에 진주한 뒤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이른 시기에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맥아더 사령부에 보냈다. 그는 그 편지에서 ‘현재의 식량 부족 원인이 조선인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조선인은 일본인의 배를 먹고, 이들이 암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조선인 200만 명이 일본인 8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먹어 치우므로’ 조선인들을 조속히 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⁵⁾ 또 ‘식량 부족인’이라는 가명으로 쓴 1947년 2월의 한 편지는 ‘100만 명의 조선인을 돌려보내면 식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범죄도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⁶⁾

판임관의 지위를 가진 관리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신체적·생리적 차이를 패전 직후 식량 부족과 조선인들의 암시장 관여 원인으로 꼽은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쓴웃음을 짓게 만들지만 그는 그렇게 밥통이 큰 조선인들을 왜 대규모로 강제 동원해서 일본의 광산과 공장에서 배를 끓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의 국익에 충실한 한 관리가 구식민지인에 대한 공포와 우려 때문에 미군 점령 직후 점령당국을 상대로 조선인에 대한 흑색선전을 펼친 에피소드의 하나로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위의 편지들은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일본 패전 직후의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구식민지인들에게 전가하는 전도된

35) Box 231, Tab 2 Doc. 1918, 이노우에 후쿠조(井上福藏), 1945. 10. 26.

36) Box 235, Tab 42 Doc. 28140, 식량 부족인, 1947. 2. 19.

인식을 가졌음을 보여 준다. 두 편지는 점령 직후에는 200만 명, 1947년 2월 시점에는 100만 명의 조선인을 식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조선인들의 조속한 귀환을 식량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점령당국의 지시와 일본정부의 주선에 의해 조선인들의 공식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46년 4월 이전 이미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귀환했지만 식량 위기는 1946년 5월, 6월에 절정에 이르렀다. 패전 직후의 이른 시점부터 이러한 전도된 인식이 표출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토대나 배경이 궁극하지만 두 통의 편지는 일본 사회가 전쟁의 원인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음을 드러낸다. 오히려 일본 사회가 패전 직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에 즉자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재일조선인이 패전 직후부터 그러한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위의 편지들은 식량 위기의 해결이라는 경제적 이유에서 조선인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지만 동시에 조선인을 암거래자, 우범자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아래 편지는 발신자가 조선인을 각종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종적 편견과 연결시켜서 이해했음을 보여 준다.

[편지 G] 조선인은 중국인, 일본인보다 열등한 인종이고, 조선인이 일본의 경제를 착란(錯亂)시키고, 일본의 치안을 어지럽히며, 절도, 소매치기 등이 조선인의 집단적인 직업이고, 식료 기타 중요물자를 매점하므로 모든 조선인 가정을 수색하여 숨긴 물자를 압수하고, 이들을 조선으로 추방하기 바랍니다.(前田善次郎, 北陸線 越中國 石動町 거주, 1947. 8. 7, Box 236)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이나, 한반도나 모두 커다란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혼란에 빠졌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모든 사회·경제적 혼란과 민중이 겪은 생활고의 구조적 배경은 전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착취에 있지만 재일조선인은 전전에는 그러한 침략과 착취의 희생자였고, 전후에는 일본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

되었다. 일본인 편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암시장에서 조선인의 발호를 비난했다.

패전 직후의 세태를 “여자는 팡팡, 남자는 암거래자”라고 묘사했듯이 암시장은 당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존재를 규정한 생활양식의 중요한 일부였다.³⁷⁾ 흥미 있는 것은 점령 직후만 하더라도 편지에 나타난 암시장의 횡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초점은 대부분 군국주의자들과 전범들, 암시장을 움직이는 자들이 한 통속이고, 경찰이 암시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아졌다. 편지는 암거래 물품이 군수창고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즉 군인·군속, 관리 등 군국주의자, 전범으로 분류되는 자들이 물품 공급자로 지목되었고, 경찰은 그 관리자로서 암거래를 조장했으며, 그것을 단속하기는커녕 암시장 상인과 암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편지들은 물가폭등과 암거래의 원인으로 구지배층, 또는 구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던 ‘전쟁수익자’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비난했다.³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암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자의 공급과 시장의 관리다. 암시장에 공급된 물품은 주로 곡물, 해산물 등 식량과 식품, 이전의 군용 물자였고, 점령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품도 있었다. 시장 관리는 경찰의 묵인 과 방조 하에 ‘야쿠자구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창녀들의 세계와 유사하게 암시장에도 ‘제3국인’이 대거 참여했다. 1946년 7월 일본인 ‘마쓰다구미’(松田組)와 대만인 조직이 도쿄의 시부야 지역을 둘러싸고 세력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37) John Dower, *Embracing Defeat*, p. 139. 팡팡은 창녀 또는 ‘양공주’를 일컫는 당시 속어다. 일본어 かつぎ-や(担ぎ屋)는 장돌뱅이(행상, 도보장사), 밀매인, 아바위꾼, 미신을 믿는 사람 등을 일컫는 중의적 표현이지만 당시 세태를 반영해서 암거래자로 옮겼다. 영어로 옮기면 black-market peddler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38) 대표적으로 후쿠시마(福島)현 거주 엔도 기미(遠藤 公)의 1946년 1월 21자 편지 및 야마모토 고쿠슈(山本黒手)의 1946년 1월 7일자 편지. 모두 Box 232. 암시장의 발생 원인과 암시장의 작동 방식, 그리고 암시장을 움직인 세력에 대해서는 John Dower, *Embracing Defeat*, pp. 112~120 “Inflation and Economic Sabotage” 및 pp. 139~148 “Black-Market Entrepreneurship” 참고. 존 다우어는 일본 항복 직후 일본정부의 군사 자금·군수 물자의 대량 방출, 정부 관료와 결탁한 군수업자, 군인·군속, 관리의 발호와 부정·부패 등이 암시장의 온상이었음을 지적하고, 패전 직후 경제 혼란과 위기는 이러한 일본정부, 군부의 부정·부패와 일본정부·점령당국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암시장에 대한 비난의 초점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David Conde,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Far Eastern Survey*, vol. 16, no. 4, 1947. 2, pp. 41~42 참고.

서 서로 총질을 하며 싸우는 통에 대만인 수십 명이 살상되고, 일본인 경관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부야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찰과 대만인·조선인 사이의 적대관계는 한층 노골적이 되었고, ‘3국인’에 대한 편견이 증대되었으며, 암시장의 횡포와 범죄 증가율에 대한 대중의 원성이 아시아인들을 향하게 만들었다. 또 암시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경찰의 무능력이 노정되었고, 경찰은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³⁹⁾

암시장의 존재양태나 시부야 사건 같은 것들이 재일조선인 등 3국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지만 패전 직후만 해도 ‘전쟁수익자’들이 암시장의 배후로 지목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조선인들이 암시장과 범죄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분위기의 반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암시장이 일본인들의 생활양식의 일부로 자리잡으면서 그 내부에서는 나름의 ‘직업 윤리’가 만들어졌고, 일본인과 3국인들 사이의 갈등도 오히려 적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지만 존 다우어의 통찰이 제시하듯이 최상층에서부터 최하층까지 암시장의 부패한 존재방식은 정치와 예고된 ‘민주개혁’에 대한 신뢰를 촉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자유시장’의 정글 같은 성격은 일본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상호부조하는 가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민도록 교화되었던 일본인들에게 그 환상을 깨트리는 충격요법과 같았다. 암시장에 관계했던 한 일본인의 증언처럼 “천황의 신성 부정, 점령당국이 발표한 자유주의적·민주적 정책 등 그 모든 것들이 암시장에 모여든 우울한 군상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⁴⁰⁾

존 다우어의 지적은 조선인이 전후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사를 준다. 일본인, 3국인 할 것 없이 전후 일본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이 암시장에 참여했고, 많은 일본인들에게 암시장이 경제 그 자체였다면 조선인의 암시장 참여 사실이나 조선인의 참여 빈도가 그리 문제

39) John Dower, *Embracing Defeat*, pp. 140~144.

40) John Dower, *Embracing Defeat*, pp. 144~147.

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경우 중요한 것은 자신도 그 일부로서 암시장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가진 긍정성, 부정성을 모두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들에게 그 부정성을 전가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기에 손쉬운 대상이 조선인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의 암시장 연루가 조선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계기와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다. 조선인은 그 존재 자체가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데다 이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가 됨으로써 일본 사회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까지 얻게 되었다.

전후 일본 사회의 이러한 사회심리적 분위기는 전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전전부터 존재했던 일본 사회의 조선인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적 우월감이 전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전후의 새로운 상황 전개와 맞물려 그것에다 새로운 내용과 색채가 가미되었다.

[편지 H] 만약 동양인 중 일본인에 대해 특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태도는 장래 또 싸움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인은 역사상 도쿠가와(德川) 시대 이전에는 세계의 강대국, 문명계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일본은 문명국, 공업국으로 창조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종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가진다면 반드시 일본인의 감정 폭발을 초래할 것이다.……국가관념이 없는 인종은 열등민족이다.……재일동양인은 이겼다는 관념을 버리고 없애야 한다.……재일동양인은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승리했다는 관념을 없애야 한다.……일본인은 동양인에게 실력, 국력으로 절대 패하지 않았다.(佐藤清造, 『세계평화에 대한 조선인 중국인 재일자의 책임』, 오사카 거주, 1946. 6. 16, Box 233)

‘전승국민화’한 동양인이라는 어조는 아마도 쇼지가 지적했듯이 민족적 우월의식에 상처를 입은 굴욕감으로부터 비롯된 증오감조차 띠고 있다. 그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스스로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타민족에

대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담자가 된 것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였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의 자각도 없고, 민족적 우월의식은 무반성인 채로 잔존했'음을 지적했다.⁴¹⁾ 편지 H는 일본이 이미 도쿠가와 시대부터 문명계에 돌입했음을 강조 하지만, 앞의 편지 F는 일본인이 맥아더 사령부의 시정방침에 적극 호응해서 종래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한 사실을 강조한다. 즉, 미군 점령 하의 '전후개혁'이 일본인의 동양인에 대한 민족적 우월의식을 새로이 보강하는 역할을 했다.

전전부터 존재한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이 전후 형성된 차별의식의 심리적 기초였다면 일본에서 사회운동의 격화와 미·소간 냉전의 도래는 재일조선인을 사회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불안 요소, 체제 위협 요소로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고바야시 도모코는 1946년만 해도 점령당국이 조선인들을 사회문제로 인식했고, 이들을 공산주의자와 일체화하는 것은 1948년경부터라고 분석했지만⁴²⁾ 일본인 편지에는 꽤 이른 시기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사회적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또 조선인을 공산주의자와 일체화하면서 정치불안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모리 마키키치(森卷吉)는 1947년 3월에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에서 일본이 공산주의로 경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사회적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 그는 재일조선인연맹(이하 '조련')을 공산당의 한 분파로 지목하면서 '이 단체는 남조선과는 관련이 없고, 북조선과 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⁴³⁾ 앞의 편지 F도 1947년 3월에 작성된 것인데 이 무렵부터 일본인 편지들에서 냉전 의식에 입각한 국제정세 인식과 반공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리의 편지에서 주목할 것은 재일조선인들의 활동을 공산주의 운동과 일치시키면서 그것을 정치적 불안의 주요 요소로 파악하는 그의 인식이 한반도 분할점령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두 가지 점에서 흥미할 가치가 있다. 하나는 한반도 분할점령

41) 山田昭次, 「八・一五をめぐる日本人と朝鮮人の断層」, 8쪽, 10쪽.

42) 小林知子, 「GHQの在日朝鮮人認識に関する一考察」 참고.

43) Box 232, 모리 마키키치(森 卷吉), 1947. 3. 20.

이 가진 국제정치적 연관성에 의탁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는 인식태도의 만연과 그것이 가진 비역사성의 문제다. 한반도 분할점령은 연합국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한국인들의 의사와 전혀 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 문제와 관련해 그러한 전후처리 방식의 졸속성과 타율성을 비판하기보다는 한반도 분할점령에 반영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어느 일방에 의존해서 일본의 전후 재건과 부흥방향을 구상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재일조선인관을 합리화하는 태도가 일본 사회에 만연했다. 다른 하나는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으로 이어짐으로써 역으로 그러한 사태 발전이 재일조선인의 존재양태와 처지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점령당국의 재일조선인 인식을 분석한 고바야시의 연구나 재일조선인 단체의 자치활동을 분석한 정영환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바야시의 글에서 주목할 것은 점령당국이 점령 기간 중 어느 시점부터 조선인의 활동을 공산주의 활동과 등치시켜 탄압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관철되는 점령당국의 정세 인식 태도와 그 의도에 대한 분석이다. 점령당국은 점령 초기부터 일본 내 사회운동의 격화를 우려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운동을 체제내화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탄압했다. 그러나 점령당국은 재일조선인 활동의 일본 내 사회운동, 또는 공산주의 운동과의 연대보다 재일조선인 활동이 ‘소련, 평양, 조련, 일본공산당’으로 이어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연결고리가 아닌가 하는 점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다. 고바야시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 관계를 앞세운 이러한 인식이 생활상의 요구, 한국의 통일·독립 요구 등 한반도 정세와 연동된 당시 재일조선인 활동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⁴⁴⁾

한편 정영환은 조련 자치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자치대 활동의 목표가 ‘동포의 생명·재산 보호’였고, 동시에 ‘불량배’ 처벌을 통한 조선인 내부로부터의 침범행위 제재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점령당국과 일본 경찰의

44) 小林知子, 「GHQの在日朝鮮人認識に関する一考察」, 172~175쪽.

조련 자치대 활동 부인, 나아가 조련 자치대 활동 그 자체의 소급적 범죄화는 자치대 활동의 양·불량 여부보다 자치대의 '자치' 활동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았기 때문이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미군 점령하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자치' 활동이 부인되고, '조선인 폭도'론에 의해 도색되며, 이후 그것이 '빨갱이(아카)'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⁴⁵⁾

전후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의 존재는 해결되지 않은 식민지배의 상징이었지만 재일조선인은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한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전전 재일조선인이 경찰이라는 특정권력의 강제를 받는 존재였다면 전 후에는 일본 사회 전체의 차별이라는 압력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⁴⁶⁾ 전전의 재일조선인이 치안유지법에 의한 '보호·관찰·취체'의 대상이었다면 전후 재일조선인의 활동은 점령당국의 지시로 일본정부가 발표한 칙령 311호에 의해 '점령군에 유해한 행위'로 규제되었다.⁴⁷⁾ 그리고 재일조선인은 최종적으로 일본정부의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관리' 대상이 되었다. 위의 일본인 편지들에 나타나듯이 조선인이 식량난의 원인 제공자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골칫덩어리로, 또 공산주의 활동과 연결된 정치적 불안요소로 전화해 가는 일련의 과정은 전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이 구조화되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심리적 토대를 잘 보여 준다.

앞에서 패전 직후 일본 사회의 조선인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편견의 내용, 그 작동방식과 심리적 기제를 분석하고, 그것의 역사적 연원을 지적했지만 그러한 인식과 여론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와 기제가 어떻게 제공되고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 전후의 조선인관이 전전의 조선인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구성 내용의 공통성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등 각각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만 패전 직후 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과 여론이 자

45) 鄭榮桓, 「解放」直後在日朝鮮人自衛組織に関する考察 — 朝連自治隊を中心に, 174~176쪽.

46) 樋口雄一, 「日本の地域社会と在日朝鮮人 — 神奈川県域を中心に」, 13쪽.

47) テッサ・モリス・スズキ, 「占領軍への有害な行動 — 敗戦後日本における移民管理と在日朝鮮人」, 206~207쪽.

연발생적이고 우연적으로 마련되었다기보다는 일본정부와 점령당국, 그리고 언론이 이러한 여론을 선도하거나 주도하면서 그 인식 방향을 제공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⁴⁸⁾

4. 맺음말

이 글은 전후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보낸 일본인의 편지들이 그들의 생활세계와 생활감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 자료들을 통해 미군 점령기 일본의 사회상과 사회의식을 살펴보았다. 또 자료의 성격과 편지에 나타난 미군 점령 초기 여론 동향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점령당국의 편지 여론조사 보고서를 먼저 분석했다. 점령당국은 자신들을 향한 일본인들의 편지, 또는 일본인들 사이에 교환된 편지를 분석하거나 검열하여 그것을 일본 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원으로 활용했고, 또 그것을 점령정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수단과 매개로 이용했다. 대체로 일본인들의 편지는 식량난, 귀환 등 개인들의 일신상의 이해관계를 반영했지만 천황제 폐지, 전후개혁, 전범재판 등 당시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의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점령당국의 주도로 수행된 이른바 전후개혁은 상징천황제의 확립,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수립 등 전후 일본 정치구조의 골격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일본인들은 대체로 이를 환영하거나 수용했다. 하지만 편지에 의하면 보통의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개혁과 민주화의 실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매우 높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특히 통치 기구의 말단과 지방 사회에

48) 1946년 4월과 5월의 반미(飯米)획득 데모와 식량메이데이 데모 이후 점령당국과 일본정부, 언론은 일제히 암시장의 암거래자들이 '제3국인' 또는 '비일본인'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했고, 6월에는 그것이 '대만인'과 '조선인'으로 바뀌었다. 이후 조선인들의 활동은 '점령에 유해한 행동'으로 비난받기 시작했다. 1946년 7월과 8월 오무라 내무상, 이시바 시 재무상, 시이쿠마 진보당 의원 등 정부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조선인을 공격하는 발언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일본 사회의 반조선인 여론을 이끌었다. 점령당국도 이러한 히스테리적 여론 물이에 동조하고 기여했다. 1946년 일본정부와 언론, 점령당국의 반조선인 태도와 연동에 대해서는 David Conde,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참고.

서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반응은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의견이 많았고, ‘특권계급’의 온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것은 천황이나 점령당국이 아니라 관리, 경찰, 대의사, 정·총장 등 기존 통치구조를 움직이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편지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혁과 민주화는 제도 수립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의 변화를 포함하여 운영의 실상이 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할 때 편지에 나타난 이러한 반응은 전후개혁 자체에 대한 재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쟁책임 문제를 언급한 편지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점령 직후만 해도 전범 고발 편지가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범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편지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전범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편지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도로 천황이 면책되는 등 전범재판이 일본과 미국의 합작에 의한 정치재판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전쟁책임이 희석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고, 전범재판이 A급 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재판으로 옮겨가면서 전쟁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확대되었다. 전쟁책임과 관련해 국민 사이에 지배자는 가해자, 국민은 피해자라는 ‘피해자론’이 확산되었고, 전쟁책임의 방기는 지배층의 타민족 침략과 식민지화의 가담자로서 국민의 책임에 대한 자각도 봉쇄했다.

기존 연구들이 함축하듯이 전후개혁의 불철저성, 천황의 전쟁책임 면책과 일본 사회의 전쟁책임 방기,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의식의 부재는 각각 독립된 사안 이 아니라 서로 연동하고 있다. 특히 편지에 나타난 재일조선인관이 식량난의 원인,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 정치적 불안요소인 공산주의자로 변해 가는 과정은 전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의 존재양태와 그 전이과정을 잘 보여 준다. 그러한 인식의 밑바닥에서 전전부터 존재하던 인종적·민족적 편견이 여전히 작동했으며, 한반도 분단, 냉전의 도래와 같은 전후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가 그것에다 새로운 내용을 부가했다. 당시 일본 사회의 재일조선인관을 그것이 형성되는 정치·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까지 시야에 넣고 보면 재일조선인은 전후 일본 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다기보다

일본 사회의 혼란과 모순을 은폐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기
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인들의 편지에 나타난 재일조선인관의 역사적 성격과 특징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식 대상인 재일조선인들의 입장과 비교를 통해 보다 잘 이해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이 접수한 편지들 가운데에는 재일
조선인의 편지도 적지 않다. 재일조선인의 편지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것으로 유한한 장치를 통해 무한과 숭고를 다루려 한 근대문화 일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어령의 일본문화론 속에서 한국은 직접적으로 언표할 수 없지만 내내 잠재하는 사고의 한계 혹은 활력으로서 작용하는데, 저 작은 나라 한국의 표상불가능성은 바로 그렇게 해서 숭고한 것으로 진화된다. 이어령의 일련의 일본문화론은 축소지향이라는 ‘작어진 일본’ 안에서 한국문화론을 세계적 차원으로 승화(sublimation)시키려 했던 후기식민지적 실천의 일종이었다.

주제어: 이어령, 축소지향, 제유, 일본인론, 후기식민지

이병철의 일본 모방과 추월에 관한 시론 | 김영옥

투고일자: 2010년 6월 6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이 글은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의 용일(用日)에 관한 것이다. 이병철은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일본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는 등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했다. 더불어 일본은 모방의 대상이었다. 부족한 자본과 기술, 경영방식을 일본과의 제휴를 통해 보완하면서 일본처럼 되려고 노력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의 의존도가 매우 컸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병철은 일본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을 모방하면서 자본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1970년대 후반부터 이병철은 기술 및 자본 제휴선을 미국과 유럽 쪽으로 돌렸다. 더불어 이병철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병철은 생전에 극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아들이자 후계자인 이건희에 와서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이병철의 일본인식은 식민지기를 살았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이중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남긴 단편적인 기록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피해의식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설령 이병철의 일본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해도 이것이 이병철의 용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업경영은 인식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이병철, 삼성, 용일, 도쿄구상

일본인의 ‘전후’와 재일조선인관: 미군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에 나타난

일본 사회의 여론 | 정응옥

투고일자: 2010년 6월 11일 | 심사일자: 2010년 6월 23일

일본인들은 미군 점령기에 점령당국과 맥아더 장군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점령당국은 이 편지들을 분석하거나, 일본인들 사이에 교환된 편지를 검열했고, 그것들을 일본 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원으로 활용하거나 점령정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고찰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대체로 일본인들의 편지는 식량난, 귀환 등 개인들의 일신상의 이해관계를 반영했지만 천황제 폐지, 전후개혁, 전범재판 등 당시의 중요한 정치·사회적 의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패전 직후 일본인들이 맥아더 장군과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은 그 시기 일본인들의

생활세계와 생활감정을 잘 드러낸다. 이 글의 목표는 일본인의 보통사람들이 보고 겪은 전후 일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일본인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일본인들의 편지에 나타난 전후개혁, 전쟁책임,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점령당국의 주도로 수행된 이른바 전후개혁은 상징천황제의 확립,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수립 등 전후 일본 정치구조의 골격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일본인들은 대체로 이를 환영하거나 수용했다. 하지만 편지에 의하면 보통의 일본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개혁과 민주화의 실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매우 높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신랄했다. 특히 통치기구의 말단과 지방 사회에서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반응은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인 의견이 많았고, '특권계급'의 온존을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과 민주화가 제도의 수립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의 변화를 포함하여 운영의 실상이 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할 때 편지에 나타난 이러한 반응은 전후개혁 자체에 대한 재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쟁책임 문제를 언급한 편지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점령 직후만 해도 전범 고발 편지가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범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편지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전범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편지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도로 천황이 면책되는 등 전범재판이 일본과 미국의 합작에 의한 정치재판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전쟁책임이 희석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고, 전범재판이 A급 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재판으로 옮겨가면서 전쟁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확대되었다. 전쟁책임과 관련해 국민 사이에 지배자는 가해자, 국민은 피해자라는 '피해자론'이 확산되었고, 전쟁책임의 방기는 지배층의 타민족 침략과 식민지화의 가담자로서 국민의 책임에 대한 자각도 봉쇄했다.

일본인들의 편지에서 재일조선인은 식량난의 원인,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골치덩어리, 정치적 불안을 일으키는 빨갱이로 인식되었다. 또 그러한 인식의 밑바닥에서 전전부터 존재하던 인종적·민족적 편견이 여전히 작동했으며, 한반도 분단, 냉전의 도래와 같은 전후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가 그러한 편견에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당시 일본 사회의 재일조선인관을 그것이 형성되는 정치·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까지 시야에 넣고 보면 재일조선인은 전후 일본 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다기보다 일본 사회의 혼란과 모순을 은폐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기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제어: 일본의 전후개혁, 일본의 전쟁책임, 일본 사회의 재일조선인관, 상징천황제, 전범재판, 맥아더, 민간정보교육국